



보도시점 2023. 5. 3.(수) 16:00 이후 배포 2023. 5. 3.(수) 10:00

# 불합리한 행정조사 정비로 국민과 기업의 부담 완화

- 불요불급한 행정조사 폐지 포함 행정조사 정비과제 77건 마련
- 행정조사 통합 연번 부여 등 행정조사 관리 체계화

□ 기업과 국민은 행정조사로 인한 부담과 불편을 지속 제기해 온 바, 이에 정부는 불합리한 행정조사를 정비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기로 하였다.

○ 국무조정실은 2022년 9월부터 관계기관\*과 함께 77건의 행정조사 정비과제와 행정조사 관리 체계화 방안을 포함한 ‘행정조사 정비방안’을 마련하고, 4월 28일(금)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하여 확정했다.

\* 각 부처, 한국행정연구원, 한국법제연구원

□ 정비과제의 주요 내용 및 대표 개선과제는 다음과 같다.

<p><b>① 필요성·실효성 없는 행정조사, 폐지·통합·축소</b></p> <p><b>☑ 수상구조사 교육기관 점검</b></p> <p><b>현행</b> 수상구조사 교육기관 지정을 위한 점검 시, 해양경찰청 지방청의 조사와 해양경찰청 본부의 서면심사를 이중으로 실시</p> <p><b>개선</b> 본부의 서면심사를 폐지하여 중복조사 방지</p> <p><small>* 25년 상반기 개정 예정</small></p> 	<p><b>② 조사방식 개선 (조사 횟수 완화, 조사 주기 연장 등)</b></p> <p><b>☑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제출</b></p> <p><b>현행</b>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(상시 50인 이상)는 장애인 고용계획과 실시상황을 연 2회 제출</p> <p><b>개선</b> 연 1회로 완화</p> <p><small>* 23년 하반기 개정 예정</small></p> 
<p><b>③ 행정조사 실시 근거·방법 등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</b></p> <p><b>☑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</b></p> <p><b>현행</b>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조사에 대한 명시적 근거는 부재, 위반자 처벌규정만 존재</p> <p><b>개선</b> 관련 법령 개정으로 위반행위 조사를 위한 근거 규정 마련 (토지 및 건축물 등 출입·조사 등)</p> <p><small>* 23년 하반기 개정 예정</small></p> 	<p><b>④ 과도한 행정제재 완화</b></p> <p><b>☑ 원가·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및 검사</b></p> <p><b>현행</b> 검사 거부·방해·기피한 자에게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</p> <p><b>개선</b> 행정형벌 규정을 과태료로 전환</p> <p><small>* 23년 제정 예정</small></p> 

① 유사·중복으로 실시되는 행정조사 및 실효성 없는 조사는 폐지·통합하고, 폐지·통합이 어려운 행정조사는 공동조사로 전환한다. (26건)

✓ **수상구조사 교육기관 점검** (해경청)

**기존** 수상구조사 교육기관 지정을 위한 점검 시, <sup>1)</sup>해양경찰청 지방청의 조사(서면·현장)와 <sup>2)</sup>해양경찰청 본부의 조사(서면)가 이중으로 실시

**개선** 해양경찰청 본부에서 실시하는 서면심사를 폐지하여 중복조사 방지

✓ **고령자 고용현황 및 정년현황 제출** (고용부)

**기존** 사업주(상시 300인 이상 사업자 대상)에게 매년 1월 말까지 고령자 고용현황 제출 의무 부과

**개선**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·상실 신고 시 고령자 고용현황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

② 기업에 대한 행정조사 횟수 완화, 조사 주기 연장, 비대면 방식 확대 등 조사방식을 조사대상자의 편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전환한다. (26건)

- 또한, 지자체별 산발적으로 시행되는 행정조사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마련·배포하여 행정조사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제고한다. (3건)

✓ **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제출** (고용부)

**기존** 장애인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(상시 50인 이상)는 연 2회\*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제출

\* <sup>1)</sup>전년도 장애인 고용계획 실시상황 및 해당연도 고용계획(~1월과, <sup>2)</sup>해당연도 고용계획의 상반기 실시상황(~7월)

**개선**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제출 의무를 연 1회로 완화

✓ **옥외광고업자 영업실태 조사** (행안부)

**기존** 영업실태 조사의 주기, 내용, 사전통지 등 지자체에 대한 가이드라인 미비

**개선** 지자체 가이드라인 수립

③ 행정조사 실시 근거 및 구체적 방법·절차에 대한 규정이 미비한 경우, 실질적인 조사 주체에 대한 위임·위탁 규정이 미비한 경우 등 법령에 이를 명확히 규정하여 행정조사 법정주의를 확립한다. (16건)

✓ **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** (국토부)

**기존**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조사에 대한 명시적 근거는 부재, 위반자 처벌규정만 존재

**개선** 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개정을 통해 위반행위 조사를 위한 토지 및 건축물 등 출입·조사의 근거 규정 마련

④ 행정조사 거부 등에 대한 제재 수단을 행정형벌에서 행정질서벌로 전환하여 조사대상자의 부담을 경감한다. (6건)

✓ **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및 검사** (기재부)

**기존** 검사 거부·방해·기피한 자에게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

**개선** 행정형벌 규정을 행정질서벌(과태료)로 전환

□ 행정조사 관리 체계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

- 행정조사에 대한 각 부처의 책임성 부여를 위해, 행정조사에 통합 연번을 부여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,
- 조사목적, 행정규제 유무, 조사 필요성 등에 따라 행정조사의 유형을 분류하고 유형별 정비방안을 마련·확정할 예정이다.
- 그 외에도 효율적 행정조사 운영·관리를 위해 안내서를 제작·배포하고 행정조사 담당자 교육을 병행할 계획이다.

□ 정부는 행정조사 정비과제에 대해서 국민과 기업이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법령 정비·행정조치 등을 신속히 추진, 이행상황을 점검하고,

- 행정조사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불합리한 행정조사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.

담당 부서	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실	책임자	과장	김윤경 (044-200-2432)
		담당자	사무관	정부엘 (044-200-2431)





규제혁신

# “ 불합리한 행정조사가 정비로 국민과 기업의 부담 완화 ”

## 행정조사 정비방안

### I 불합리한 행정조사 77건 정비·개선 I



불합리한 행정조사로 인한  
국민·기업의 부담과 불편 존재

77건의 행정조사 정비·개선으로  
국민·기업의 부담 완화



#### ① 필요성·실효성 없는 행정조사, 폐지·통합·축소

##### 수상구조사 교육기관 점검

**현행** 수상구조사 교육기관 지정을 위한 점검 시,  
해양경찰청 지방청의 조사와  
해양경찰청 본부의 서면심사를 이중으로 실시

**개선** 본부의 서면심사를  
폐지하여  
중복조사 방지



\* 23년 상반기 개정 예정

#### ② 조사방식 개선 (조사 횟수 완화, 조사 주기 연장 등)

#####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제출

**현행**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(상시 50인 이상)는  
장애인 고용계획과 실시상황을 연 2회 제출

**개선** 연 1회로 완화



\* 23년 하반기 개정 예정

#### ③ 행정조사 실시 근거·방법 등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

#####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

**현행** 개발제한구역 내  
불법행위 조사에 대한 명시적 근거는 부재,  
위반자 처벌규정만 존재

**개선** 관련 법령 개정으로  
위반행위 조사를 위한 근거 규정 마련  
(토지 및 건축물 등 출입·조사 등)



\* 23년 12월 개정 예정

#### ④ 과도한 행정제재 완화

##### 원가·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및 검사

**현행** 검사 거부·방해·기피한 자에게  
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 
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

**개선** 행정형벌 규정을  
과태료로 전환



\* 23년 개정 예정

### I 행정조사 관리 체계화 방안 마련 I



全 행정조사에  
통합 연번을 부여하여 체계적 관리



행정조사의 유형 분류  
(조사목적·필요성, 행정규제 有無 등)  
및 유형별 정비방안 마련



행정조사 담당자 교육 및  
안내서 제작·배포

## 붙임 2

## 정비과제 세부내용 (77건)

### ① 불요불급한 행정조사 폐지·통합·축소 : 26건

#### 1. 유사·중복 행정조사 폐지·통합 : 18건

연번	행정조사명 (부처명)	내용	조치사항 (조치시한)
<b>① 중복·유사조사 및 실효성 없는 행정조사 폐지 (5건)</b>			
1	기업 및 공공기관의 가족친화 수준조사 (여가부)	<p><b>기존</b> 모범적 가족친화기업에게 인증을 부여하는 '가족친화 인증제'와 조사대상 및 지표가 유사</p> <p><b>개선</b> 가족친화수준조사는 폐지하고 가족친화 인증 심사 자료 등을 활용하여 업무 추진</p>	가족친화법 개정 ('24.下)
2	가족친화 사회환경조성 친화조사 (여가부)	<p><b>기존</b> 기초자치단체에서 기업·공공기관 대상 보육, 기업경영, 시설환경 분야 등의 가족친화 정도를 측정하나 가족친화 인증제 등 관련 실태조사와 유사</p> <p><b>개선</b> 가족친화 사회환경조성 친화조사를 폐지하고 지자체 시설현황, 가족친화 인증 심사 자료 등을 활용</p>	가족친화법 개정 ('24.下)
3	수상구조사 교육기관 점검 (해경청)	<p><b>기존</b> 수상구조사 교육기관 지정을 위한 점검 시 <sup>1)</sup>해양경찰청 지방청의 조사(서면·현장), <sup>2)</sup>해양경찰청 본부의 조사(서면)가 이중으로 실시</p> <p><b>개선</b> 해양경찰청 본부에서 실시하는 서면심사는 폐지</p>	수상 구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('23.上)
4	지능형 로봇투자회사 감독·검사 (산업부)	<p><b>기존</b> 지능형로봇법에 따라 산업부는 지능형로봇투자회사 감독·검사 권한이 있으나 법률 제정 이후 지능형 로봇투자회사가 결성된 사례가 없음</p> <p><b>개선</b> 사문화된 조사권 폐지</p>	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개정 ('23.下)
5	계약학과 설치운영 현황 등 자체점검결과 보고 (교육부)	<p><b>기존</b> 계약학과를 설치·운영하는 대학은 학과명, 재학생 및 계약체결 대상 산업체 등의 현황을 포함한 자체 점검결과보고서 등 제출</p> <p><b>개선</b> 동 행정조사를 폐지하고, 대학 산학협력활동 조사 등을 활용하여 계약학과 각종 통계 및 운영 현황 등을 파악하는 것으로 검토</p>	계약학과 설치·운영 규정 개정 ('24.下)



연번	행정조사명 (부처명)	내용	조치사항 (조치시한)
<b>㉔ 행정조사 통합·자료 공유 (13건)</b>			
6	대중교통기본계획 수립 위한 자료 제출 (국토부)	<p><b>기존</b> 대중교통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5년 단위로 자료를 제출받고 있으나 매년 실시하는 대중교통현황조사 자료와 유사</p> <p><b>개선</b>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자료 제출을 매년 수행되는 대중교통현황조사로 통합하여 활용</p>	대중교통현황 조사용역 과업지시서 및 내부방침 수정 ('23.上)
7	고령자 고용현황 및 정년현황 제출 (고용부)	<p><b>기존</b> 사업주(상시 300인 이상 사업장 대상)에게 매년 1월 말까지 고령자 고용현황 제출 의무 부과</p> <p><b>개선</b>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·상실 신고 시 고령자 고용현황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</p>	고령자고용법 시행규칙 개정 ('22.7월)
8	직접생산 확인조사 (중기부)	<p><b>기존</b> 직접생산 위반조사를 행정기관(중기부, 조달청)별로 각각 실시</p> <p><b>개선</b> 사후조사 가이드라인 마련, 합동점검 실시, 심의 위원회 운영 등 사후조사 표준화</p>	직접생산 확인 현장조사 지침 마련 완료 ('22.12월)
9	여성폭력 실태조사 (여가부)	<p><b>기존</b> 성폭력·가정폭력실태조사 모두 여성폭력과 관련이 있음에도 개별법령에 따라 각각 실시 중</p> <p><b>개선</b> 여성폭력 관련 개별 실태조사 통합 검토 추진</p>	연구용역 추진 ('23.下)
10	성폭력 실태조사 (여가부)		
11	가정폭력 실태조사 (여가부)		
12	사행산업 현장확인 및 지도감독 (문체부)	<p><b>기존</b> 사행산업인 체육진흥투표권은 현장 확인 및 지도 감독의 대상이나 지자체에서도 판매 관련 위반행위 조사 실시</p> <p><b>개선</b> 체육진흥권 판매상한액 초과 판매행위와 관련하여 사감위-지자체 간 자료를 공유하는 등 조사 개선</p>	지자체-사감위 정보 공유 ('23.下)
13	학교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교원의 근무환경 실태조사 (교육부)	<p><b>기존</b> '교육시설 안전관리 현황'과 '도서·벽지 근무 교원 근무 환경 실태조사'의 건축물 등 기초 정보가 유사·중복</p> <p><b>개선</b> 교육시설통합정보망 구축을 통해 기초 정보를 공유해 각 행정조사의 효율성 도모</p>	교육시설 통합정보망 구축 ('24.上)
14	법규수행능력 평가 및 통합법규 준수도 평가 (관세청)	<p><b>기존</b> 수출입물류업체는 <sup>1)</sup>통합법규준수도, <sup>2)</sup>법규수행 능력평가를 각각 받고 있으나 평가산식의 차이로 제도별 평가점수 차이 발생</p> <p><b>개선</b> 통합법규준수도 및 법규수행능력평가를 통합하여 하나의 평가방식 마련</p>	통합법규 준수도 평가와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 ('24.下)

연번	행정조사명 (부처명)	내용	조치사항 (조치시한)
15	선박용품 등 재고조사 및 항공기용품 등 재고조사 (관세청)	<p><b>기존</b> 선박용품 공급업자와 항공기용품 공급업자에 대한 재고조사를 개별 시행</p> <p><b>개선</b> 관할 세관 내 동일 사업자의 선박용품과 항공기용품 재고관리 현장조사를 통합</p>	관할 세관 내 선박·항공기용품 공급등록 동일사업자 통합 재고조사 지침 시달 완료 (‘23.2월)
16	증장기 제대군인 방위산업체 채용현황 실태조사 (보훈처)	<p><b>기존</b> 방위산업체 직종의 취업지원실시기관을 대상으로 1)제대군인 방위산업체 채용현황 실태조사, 2)국가보훈대상자 취업지원실시기관 실태조사 개별 시행</p> <p><b>개선</b> 국가보훈대상자 취업지원실시기관 실태조사와 통합하여 운영</p>	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개정 (‘23.7월)
17	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보고 및 자료제출 (국토부)	<p><b>기존</b>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대상 1)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, 2)대중교통법에 따른 보조금 및 융자금 행정조사를 각각 실시</p> <p><b>개선</b> 노선 버스 부분의 경우 행정조사를 통합하여 운영</p>	‘23년 보조사업 추진 시 대상 지자체에 안내 (‘23.上)
18	재활용의무생산자의 제품·포장재 출고량 관련 자료 제출 (환경부)	<p><b>기존</b> 모든 재활용의무생산자는 관련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제품·포장재 출고량에 관한 자료를 환경부장관에 제출 필요</p> <p><b>개선</b> 법18조제1항에 따라 분담금을 공제받으려는 개별 의무이행 재활용의무생산자는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수 및 재활용의무이행 결과보고서에 출고량에 관한 자료를 통합하여 제출하도록 개선</p>	조사 통합 검토 (‘23.下)

## 2. 공동조사 실시 : 2건

연번	행정조사명 (부처명)	내용	조치사항 (조치시한)
19	요양기관 현지조사 및 의료급여 현지조사 공동조사 (복지부)	<p><b>기존</b> 개별법에 따라 요양기관 현지조사 및 의료급여 지급대상기관 현지조사를 별도 실시 중</p> <p><b>개선</b> 현지조사 대상기관 선정 간주규정 등 마련 또는 공동운영 방안 마련</p>	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 개정 (‘23.12월)
20	어린이 안전사고 실태조사 및 현장조사 (행안부)	<p><b>기존</b> 어린이 안전사고 관련 실태조사·현장조사가 필요할 경우 개별법을 우선 적용</p> <p><b>개선</b> 개별법이 없거나 범정부 대응 필요시 어린이안전의 기본법적인 기능을 하는 어린이안전법에 따라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조사 실시</p>	필요시 관계부처 공동조사

### 3. 조사항목 축소 : 6건

연번	행정조사명 (부처명)	내용	조치사항 (조치시한)
21	방사선 및 방사성 동위원소 이용 실태조사 (과기정통부)	<p><b>기존</b> 실태조사 문항에 일부 불필요한 항목 포함</p> <p><b>개선</b> 불필요한 문항 2건* 삭제 * 성별 구분, 방사선 관련 교육과정 운영 현황</p>	실태조사표 수정 ('23.下)
22	원자력산업 실태조사 (과기정통부)	<p><b>기존</b> 실태조사 문항에 일부 불필요한 항목 포함</p> <p><b>개선</b> 불필요한 문항 2건* 삭제 * 평균 조업률, 적정 조업률</p>	실태조사표 수정 ('23.下)
23	특수교육 실태조사 (교육부)	<p><b>기존</b> 조사항목에 대한 통계청의 승인을 거쳐 3년마다 특수 교육 실태조사 실시</p> <p><b>개선</b> 중복·유사 항목 축소 * (4월) 축소 항목 확정 → (5월) 통계청 변경 승인</p>	실태조사표 변경 ('23.6월)
24	창업기업 실태조사 (중기부)	<p><b>기존</b> 기업 일반현황을 포함하는 등 조사항목 과다</p> <p><b>개선</b>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기업 일반현황 정보(행정자료)를 활용해 조사항목 축소(5개) 및 응답자 편의 제고</p>	창업기업 실태조사표 개선 완료 ('23.2월)
25	전통시장상점가 및 점포경영 실태조사 (중기부)	<p><b>기존</b> 불명확한 조사항목, 민감한 조사항목이 존재하고 중복문항 등 설문 항목이 과다</p> <p><b>개선</b> 실태조사 항목 축소 * 상인회장 설문 10문항 축소, 점포주 설문 5문항 축소</p>	전통시장 상점가 실태조사표 개선 완료 ('22.12월)
26	국가보훈대상자 사립대 수업료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실태조사 (보훈처)	<p><b>기존</b> 사립대학의 수업료 등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실태조사 위해 수강신청서 등 4종의 서류 제출</p> <p><b>개선</b> 제출서류를 4종에서 3종으로 축소 * 출퇴근부 및 근무편성표 제출 삭제</p>	교육지원업무 처리규정 개정 완료 ('22.12월)



## ② 조사방식 개선을 통한 조사대상자 편의 제고 : 29건

### 1. 행정조사 실시 주기 및 강도 완화 : 8건

연번	행정조사명 (부처명)	내용	조치사항 (조치시한)
27	이동통신 무선국 검사 (과기정통부)	<p><b>기존</b> 주파수 할당을 받아 개설하는 무선국에 대해 변경 검사의 경우에도 예외없이 전수검사를 적용 * 변경검사와 유사한 준공검사 시에는 표본검사(10%)를 적용</p> <p><b>개선</b> 변경검사의 경우에도 표본검사 방식 채택</p>	전파법 시행령 개정 (23.上)
28	무선국의 전자파 강도 측정결과 보고 (과기정통부)	<p><b>기존</b> 정기조사 성격임에도 수시조사로 규정</p> <p><b>개선</b> 무선국의 전자파 강도 측정결과 보고를 정기조사로 변경</p>	실태조사표 수정 (차기 조사 즉시 적용)
29	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제출 (고용부)	<p><b>기존</b> 사회적기업은 사업보고서 연 2회 제출</p> <p><b>개선</b> 사업보고서 제출을 연 1회로 완화</p>	사회적기업법 개정 (24년)
30	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제출 (고용부)	<p><b>기존</b> 장애인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(상시 50인 이상)는 <sup>1</sup>전년도 장애인 고용계획 실시상황 및 해당연도 고용계획(~1월)과, <sup>2</sup>해당연도 고용계획의 상반기 실시상황(~7월)을 제출 필요</p> <p><b>개선</b> 제출 의무를 연 1회로 완화</p>	장애인고용법 시행령, 시행규칙 개정 (23.下)
31	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(조달청)	<p><b>기존</b> 창업·벤처기업 기술개발제품은 제조시설을 갖춘 기업과 협업하는 경우 직접생산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나 협업체를 중소기업에 한정하여 적용</p> <p><b>개선</b> 유사제도(우수조달물품, 혁신제품 등)를 고려하여 협업 대상기업을 '중견기업'까지 확대</p>	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 개정 완료 (22.10월)
32	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보고 (식약처)	<p><b>기존</b> 식품·식품첨가물 제도가공업자는 매년 1월까지 전년도 생산실적 보고</p> <p><b>개선</b> 타법사례 및 식품업체 생산활동의 특성을 반영하여 보고기한을 매년 2월까지로 연장</p>	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완료 (23.1월)
33	식품 HACCP 인증평가 (식약처)	<p><b>기존</b> HACCP 인증 후 매년 정기 조사·평가를 진행함에도 인증 연장 시 현장평가 및 연장심사를 예외없이 실시</p> <p><b>개선</b> 정기조사·평가 결과가 우수한 경우 인증을 자동 연장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</p>	식품위생법 개정 (24.12월)
34	건강기능식품 GMP 조사평가 (식약처)	<p><b>기존</b>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소는 연 1회 GMP 정기 조사·평가 실시</p> <p><b>개선</b> 전년도 GMP 정기평가 결과 우수업체에 대한 당해 연도 조사·평가 면제 규정 마련</p>	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 (23.1월 발의)

## 2. 사전통지 신설·강화 : 14건

연번	행정조사명 (부처명)	내용	조치사항 (조치시한)
35	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예방 목적 자료제출 (과기정통부)	<b>기존</b> 수사조사의 사전통지 시점이 평균 사전 5일로 행정 조사기본법상 사전통지 기한인 7일에 미달 <b>개선</b> 사전통지 시점을 사전 10일 전으로 개선	고시 전면개정 완료 (‘22.3월)
36	특수교육 실태조사 (교육부)	<b>기존</b> 조사실시 1개월 전 공문으로 사전통지 <b>개선</b> 조사실시 1개월 전 공문 시행 및 유선 안내 병행 * ‘23년: (5월) 조사 안내(교원, 보호자) → (6월) 조사 실시	개선 완료 (‘22.12월)
37	수출입식물 방제업체 점검 (농식품부)	<b>기존</b> 수출입식물방제업체 점검 시 사전통지 규정 부재 <b>개선</b> 점검 전 일시·목적·대상 등 사전통지 규정 신설	농약관리법 개정 완료 (‘23.1월)
38	친환경안전축산 직불제 이행점검 조사 (농식품부)	<b>기존</b> 이행점검 업무 시 사전통지 규정 부재 <b>개선</b> 점검 전 일시·목적·대상 등 사전통지 규정 신설	농업농촌공익 직불법시행령 개정 (‘23.12월)
39	경관보전직불제 이행점검 조사 (농식품부)	<b>기존</b> 이행점검 업무 시 사전통지 규정 부재 <b>개선</b> 점검 전 일시·목적·대상 등 사전통지 규정 신설	농업농촌공익 직불법시행령 개정 (‘23.12월)
40	논활용(논이모작) 직불제 이행점검 조사 (농식품부)	<b>기존</b> 이행점검 업무 시 사전통지 규정 부재 <b>개선</b> 점검 전 일시·목적·대상 등 사전통지 규정 신설	농업농촌공익 직불법시행령 개정 (‘23.12월)
41	식물검역대상 물품 저장소 검역 (농식품부)	<b>기존</b> 식물검역대상물품 저장소 점검 시 사전통지 규정 부재 <b>개선</b> 점검 전 일시·목적·대상 등 사전통지 규정 신설	저장소의 검역 및 식물검역 전용구역 기준 등(고시) 개정 (‘23.6월)
42	공인노무사회 지도·감독 (고용부)	<b>기존</b> 공인노무사회에 대한 지도·감독 관련 조사시 사전 통지 규정 부재 <b>개선</b> 공인노무사법에 사전통지 규정 마련	공인노무사법 개정 (‘23.下)
43	수상레저시설 안전점검 (해경청)	<b>기존</b> 수상레저시설 안전점검 절차에 관한 세부규정 부재 <b>개선</b> 해경서장, 시군구청장이 안전점검 시 대상시설, 목적, 날짜 등을 피검자에게 미리 사전통지하도록 안전 점검 절차 개선	수상레저 안전법 시행령 개정 (‘23.6월)
44	구매대행업자에 대한 세관장의 업무감독 (관세청)	<b>기존</b> 사전통지, 조사 연기신청, 조사결과의 통지 규정 부재 <b>개선</b> 행정조사기본법 상 사전통지, 연기 신청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 신설	구매대행업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 완료 (‘22.12월)

연번	행정조사명 (부처명)	내용	조치사항 (조치시한)
45	혈액관리 업무 검사 (복지부)	<b>기존</b> 사전통지 시기가 '방문조사 전'으로 규정 <b>개선</b> 사전통지 시기를 '방문조사 7일 전'으로 명확화	행정조사별 세부 운영 계획 변경 완료 (‘22.11월)
46	사회서비스 품질관리 보고 및 검사 (복지부)	<b>기존</b> 사전통지 관련 사항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음 <b>개선</b> 사전통지를 '방문조사 7일 전'에 하도록 지침에 마련	사회서비스 품질평가 편람 개정 (‘24.6월)
47	장애인 복지시설 실태조사 (복지부)	<b>기존</b> 사전통지 관련 사항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음 <b>개선</b> 시·군·구에 조사대상 기관에 대한 7일 전 조사 관련 사항 서면통보 의무 부과	장애인복지 시설사업안내 (지침) 개정 완료 (‘23.2월)
48	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 조사 (복지부)	<b>기존</b> 조사 관련 사전안내 미흡 <b>개선</b> 편의시설 전수조사 실시 7일 전 안내로 명확화	편의시설 실태 전수 조사 지침 개정 완료 (‘23.4월)

### 3. 정보통신망 활용 등 조사방식 개선 : 4건

연번	행정조사명 (부처명)	내용	조치사항 (조치시한)
49	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자료제출 (과기정통부)	<b>기존</b> 기본 자료제출 방식이 서면제출로 불편 야기 <b>개선</b> 정보통신망을 우선 활용해 제출하도록 변경	내부지침 개선 (즉시 적용)
50	선행교육 출제 점검 (교육부)	<b>기존</b> 학교는 평가문항 자료를 관할 교육청에 서면 제출 <b>개선</b> 시·도별 상황에 맞는 방식으로 개선 지원하고 평가문항 자료제출 방식을 전산화한 시·도 우수사례 공유	시·도별 자료제출 시스템 구축 (‘24.6월)
51	동물실험시설 등 지도·감독 (식약처)	<b>기존</b> 동물실험시설 등의 실태조사를 현장조사로 한정 <b>개선</b> 코로나 등 현장조사가 제한될 경우 화상회의 시스템 등을 활용한 비대면조사가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	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개정 (‘21.9월 발의)
52	소모성자재납품업 실태조사 (중기부)	<b>기존</b> 실태조사 시 조사개요, 항목 등에 대한 조사원 설명 미흡 <b>개선</b> 실태조사 시 관련 조사원 교육 실시 및 조사지침 보완 * (교육확대) 연 1회(‘20년) → 연 3회로 확대(‘22년) (지침보완) 지침서 오류 및 질의응답 사례 보완	조사자 교육 및 소모성자재납품업 실태조사지침서 개선 완료 (‘22.12월)

#### 4. 지자체용 행정조사 지침 마련·배포 : 3건

연번	행정조사명 (부처명)	내용	조치사항 (조치시한)
53	장사시설 등에 대한 보고 요구 및 출입 검사 (복지부)	<b>기존</b> 지자체별 공동묘지 정비 인식, 토지활용, 주민 필요 시설 등에 대한 방안 등이 상이 <b>개선</b> 2023-2027 제3차 지역수급 계획수립 지침 완료	제3차 지역수급 계획수립 지침 완료 ('23.1월 완료)
54	옥외광고업자 영업실태 조사 (행안부)	<b>기존</b> 영업실태 조사의 주기, 내용, 사전통지 등 지자체 가이드라인 미비 <b>개선</b> 지자체 가이드라인 수립	지침 마련 ('23.下)
55	관광진흥 시책 수립 등 관련 보고·검사 (문체부)	<b>기존</b> 지자체 대상 업무편람, 가이드라인 내 행정조사 관련 내용 및 지침 부재 <b>개선</b> 지자체 대상 업무편람, 가이드라인* 개선 (관광진흥법상 행정조사 관련 내용 보완) * 여행업, 관광숙박업, 유원시설업, 야영장업 등	지자체용 업무편람, 가이드라인 개선 ('23.下~)

### 3 행정조사 법정주의 확립 : 16건

#### 1. 행정조사 실시 근거 및 방법·절차 규정 마련 : 6건

연번	행정조사명 (부처명)	내용	조치사항 (조치시한)
56	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 (국토부)	<b>기존</b> 개발제한구역법 불법행위 위반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존재하나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조사에 대한 명시적 근거 부재 <b>개선</b> 위반행위 조사를 위한 토지 및 건축물 등 출입·조사의 근거 규정 마련	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 ('23.12월)
57	요양기관 현지조사 (복지부)	<b>기존</b> 건강보험법상 현지조사에 대한 위임·위탁 규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민간에 위임·위탁하는 것에 대한 현장의 문제제기로 위임·위탁하지 않고 있음 <b>개선</b> 현 건강보험법상 위임·위탁 규정은 삭제하고 업무 지원 근거 신설	국민건강보험법 개정 ('23.下)
58	의료급여 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(복지부)	<b>기존</b> 의료급여법 하위법령인 의료급여법 시행령에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현지조사 업무지원 근거가 규정되어 있음 <b>개선</b> 의료급여법에 심평원 등에 대한 업무지원 근거를 마련	의료급여법 개정 ('23.下)

연번	행정조사명 (부처명)	내용	조치사항 (조치시한)
59	어린이 안전사고 현장조사 (행안부)	<p><b>기존</b> 어린이안전법에서 현장조사 방법·절차 등에 대한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하였음에도 현재 시행령에 관련 사항 규정하지 않고 있음</p> <p><b>개선</b> 어린이안전법에서 위임한 현장조사 방법·절차 등 사항을 <b>동</b> 시행령에 규정</p>	어린이안전법 시행령 개정 (24년)
60	건설엔지니어링 협회 지도·감독 (국토부)	<p><b>기존</b> 국토부장관이 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요건을 포괄적으로 규정</p> <p><b>개선</b> 국토부장관의 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 대한 권한행사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 * 건설기술진흥법의 위반여부 확인 및 민원발생, 같은 법에 따른 신고·관리·운영의 적정수행이 필요한 경우 등</p>	건설기술 진흥법 개정 (23.下)
61	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금지행위 위반여부 조사 (방통위)	<p><b>기존</b> 금지행위 규정은 있으나 현장조사에 대한 근거 법령이 부재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에 한계</p> <p><b>개선</b> 금지행위 위반여부 확인 위한 현장조사권을 신설 하여 금지행위 조사의 실효성 확보</p>	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연구용역 실시 (24년)

## 2. 위임·위탁 행정조사의 근거규정 완비 : 10건

연번	행정조사명 (부처명)	내용	조치사항 (조치시한)
62	여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(여가부)	<p><b>기존</b> 외부 전문기관 등 실태조사 수행주체에 대한 명확한 위임 규정 미비</p> <p><b>개선</b> 외부 전문기관 또는 연구기관 등이 실태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 규정 마련</p>	여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등에 관한 규칙 개정 (23.下)
63	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(여가부)	<p><b>기존</b> 외부 전문기관 등 실태조사 수행주체에 대한 명확한 위임 규정 미비</p> <p><b>개선</b> 외부 전문기관 또는 연구기관 등이 실태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 규정 마련</p>	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(23.下)
64	가족 실태조사 (여가부)	<p><b>기존</b> 외부 전문기관 등 실태조사 수행주체에 대한 명확한 위임 규정 미비</p> <p><b>개선</b> 외부 전문기관 또는 연구기관 등이 실태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 규정 마련</p>	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개정 (23.下)

연번	행정조사명 (부처명)	내용	조치사항 (조치시한)
65	의약품등·의약외품 생산 및 수출·수입실적 (식약처)	<p><b>기존</b> 의약품·의약외품 업체에서 생산·수입실적 등을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 사단법인을 통해 보고하고 있으나 법령상 구체적인 위탁 근거 미비</p> <p><b>개선</b> 의약품·의약외품의 생산·수입실적 보고 위탁 근거 마련</p>	약사법 시행령 개정 (‘23.下)
66	수산종자생산업 실태조사 (해수부)	<p><b>기존</b> 수산종자산업 실태조사 권한을 국립수산과학원에 위임 하였으나 인력부족으로 인해 ‘21년부터 한국수산 자원공단에서 수행 중</p> <p><b>개선</b> 한국수산자원공단이 위탁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</p>	수산종자산업 육성법 시행령 개정 (‘23.下)
67	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(고용부)	<p><b>기존</b>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에 대한 위임·위탁 근거규정 미비</p> <p><b>개선</b> 전문연구기관에 실태조사 위임·위탁 근거 마련</p>	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 (‘24.上)
68	불법개설 의심 약국 행정조사 (복지부)	<p><b>기존</b> 불법개설 의심약국에 대한 관계기관·단체의 조사 업무 위임 규정 미비</p> <p><b>개선</b> 관계기관·단체에 조사업무를 위임할 수 있는 근거 마련</p>	약사법 개정 (‘23.12월)
69	종자산업 실태조사 (농식품부)	<p><b>기존</b> 종자산업에 관한 통계 작성 및 실태조사는 국립종자원장이 위임받아 수행 현장 면담조사 등 일부 조사업무는 전문연구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으나 위임규정 미비</p> <p><b>개선</b> 전문연구기관에 용역을 줄 수 있는 위임근거 규정 마련</p>	종자산업법 시행령 개정 (‘23.12월)
70	친환경적 산업구조 전환 촉진을 위한 산업디자인 통계조사 (산업부)	<p><b>기존</b> 산업디자인통계조사에 대한 위탁 근거 미비</p> <p><b>개선</b> 조사 주체(한국디자인진흥원)에 대한 위탁 근거 마련</p>	산업디자인 진흥법 시행령 개정 (‘23.下)
71	문화산업 전문회사의 감독·검사 (문체부)	<p><b>기존</b> 문화산업전문회사에 대한 감독·검사를 한국콘텐츠 진흥원에서 수행하나 법적 근거 미비</p> <p><b>개선</b>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위탁 근거를 법에 명시</p>	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개정 (‘23.下)



#### ④ 행정조사 불응 등에 대한 과도한 제재 정비 : 6건

##### □ 행정형벌 → 행정질서벌 전환 : 6건

연번	행정조사명 (부처명)	내용	조치사항 (조치시한)
72	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및 검사 (기재부)	<p><b>기존</b> 물가안정법에 따른 검사를 거부·방해·기피한 자에게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</p> <p><b>개선</b> 경제형벌 규정을 행정제재(과태료)로 전환</p>	물가안정법 개정 ('23.下)
73	광해방지사업 시설 등에 관한 보고 및 검사 (산업부)	<p><b>기존</b> 광산피해방지법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를 거부·방해·기피한 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</p> <p><b>개선</b> 경제형벌 규정을 행정제재(500만원 이하의 과태료)로 전환</p>	광산피해방지법 시행령 개정 ('23.下)
74	특정물질 관리 등에 관한 보고 및 조사 (산업부)	<p><b>기존</b>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고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</p> <p><b>개선</b> 경제형벌 규정을 행정제재(과태료)로 전환</p>	행정제재 전환을 위한 계획 수립 추진 ('23년)
75	항만협회 감독을 위한 보고 및 자료 제출 (해수부)	<p><b>기존</b> 항만법에 따라 거짓으로 보고 또는 거짓자료를 제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</p> <p><b>개선</b> 경제형벌 규정을 행정제재(과태료)로 전환</p>	항만법 개정 ('23.下~)
76	선박소유자 등 보고·자료 제출 (해수부)	<p><b>기존</b> 선박안전법에 따라 거짓의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였거나 공무원의 출입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</p> <p><b>개선</b> 경제형벌 규정을 행정제재(과태료)로 전환</p>	선박안전법 개정 ('23.下~)
77	동물실험시설 등 지도·감독 (식약처)	<p><b>기존</b>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 조사를 거부·방해·기피한 경우,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 제출한 경우 2백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</p> <p><b>개선</b> 자료요구 제출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경제형벌 규정을 행정제재(과태료)로 전환</p>	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개정 ('23.下~)